

정부 추경안 12조원대 편성… 민주 “15조까지 증액”

소상공인·취약층 4조…통상·AI 4조
민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 필요”
국힘 “추경은 타이밍…통과 협력을”
“내달 초 본회의 의결 가능” 관측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정부가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12조원대로 편성하기로 한 데 대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소한 15조원까지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10조원에서 2조원 늘리기는 했지만 한국은행 총재도 15조~20조원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아직은 국회에서 심의하고 의결

할 때까지는 시간이 더 있다”며 “좀 더 전향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금은 오직 민생과 국가 경제만 생각해야 할 때”라며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정부가 제시한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조당적 협력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예정대로 추경안을 제출할 경우 이달 말 예정위 의결을 거쳐 내달 초 본회의 의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기재부는 이날 필수 추경 규모를 10조원에서 12조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

다.

재해·재난 대응에 3조여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4조여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여원을 각각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필수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선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며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000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하고, 첨단장비 도입 및 재해 예비비

등에 2조원 수준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 48대 등을 추가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4조원 규모의 통상·AI 지원책으로는 “정책자금 25조원을 신규로 공급하고,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리겠다”며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연구개발(R&D) 등에도 2조원 이상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AI 분야에만 1조8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이를 통해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3000장 이상을 즉시 공급하고, 연내 1만장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AI 혁신펀드’

규모도 기존 9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선 △소상공인의 공공요금·보험료 납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하고 △전년대비 카드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을 추진하고 △저소득층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000억원 수준 확대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추경안을 마련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조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야5당 원탁회의 “권력기관개혁·교섭단체완화 공조”

“특검 등 ‘내란종식’ 협력”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정당은 15일 결선투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과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에 공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 5개 정당 대표자들로 구성된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원탁회의’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연 뒤 이런 내용이 담긴 ‘원탁회의 2차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내란 세력 재집권을 저지하기 위한 연대가 필요하다”며 “내란 종식을 위한 내란 특검을 실시하고 반(反)헌법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헌정수호 다수 연합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선 직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 논의를 마무리하고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결선투표제 도입은 의석이 적은 군소정당에서 꾸준히 요구해 온 의제다.

이와 관련 ‘민주당 내에서도 공감대가 이뤄졌나’라는 질문에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당내에서는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반대의 목소리도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 다당제 정치연합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당내에 있다. 이런 취지에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원탁회의 참여 정당들은 또 “사회대개혁 등 국가적 미래 과제를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고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삼아 실천할 것”이라며 “검찰, 감사원, 방첩사 등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거론된 일부 정책들은 대선 과정에서 공통 공약 형태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김선욱 기자

안도걸 “尹 정부 3년, 성장률·세수·고용·소비·투자 악화”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사진)은 15일 파면된 윤석열 정권의 3년간 무능한 경제운용 전반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향후 새로운 민주 정부에서 경제정책 설계의 반면 교사로 삼을 것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윤 정부 동안 성장률은 3분의 1 토막, 나라 곳간은 87조 원 세수 결손, 취업자 증가율 반토막, 소비·투자·수출 증가율 모두 침체 속에 고꾸라졌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법인세 1% 인하로 4조원 세금을 깎으면 성장률 2%·투자 5% 증가



·세수 7조 5000억원 확보라는 허황된 낙수 효과를 주장했지만, 현실은 투자·성장·세수 모두 추락했다”며 “결국 세수는 87조 원이나 줄었고, 재정 건전성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정부 추경안에 대해서도, “무늬만 추경, 뒷북 추경”이라며 “국내총생산(GDP) 갭 해소를 위해선 최소 35조원이 필요하고, 민주당은 이를 감안해 35조 추경안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12조원에 그쳤다. 실질 효과는 0.12~0.16%수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 영남권 산불 피해 주민에 성금 전달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영남권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성금 5억3000만원을 모아 피해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성금 전달식’에서 “지난 14일간 민주당 당원과 전국 17개 시·도당,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로 약

5억3000만원의 성금이 모였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피해 복구, 일상 회복을 위한 재난 예방 대응 체계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모금액으로 이달 중 피해 주민들에게 긴급 생계비 지원, 5월 초에 임시주거 시설 지원 등이 이뤄질 것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5일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을 방문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연합뉴스

韓, 기아 광주공장 찾아 “美 관세 부담 최소화 최선”

“자동차 산업 충격 완화에 노력”
“내란대행 사퇴” 시민단체 반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5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와 상호관세협상과 관련해 “한국 등 동맹국과 우선적으로 협상한다고 밝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이 있었다”며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협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후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을 방문해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서 생산되는 차량의 약 35%가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미국의 관세 정책에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일단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서 조선, 무역균형, 에너지 등 3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이러한 협력을 기초로 자동차 산업과 부품 산업, 철강·알루미늄 산업 등 높은 관세를 받고 있는 산업의 충격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또 “정부와 기업의 원팀으로 경제안보 태스크포스(TF)가 작동 중에 있다”며 “광주 지역 1위 기업인 기아 오토랜드를 중심으로 부품 협력업체와 함께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각별히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광주전남춤통행동은 이날 광주광산구 송정KTX역 광장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내란 동조자인 한 총리가 무슨 낮으로 민주화의 성지 광주를 찾아오느냐”고

반발했다.

이들은 한 대행이 송정KTX역에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한덕수 탄핵하라’거나 ‘즉각 사퇴하라’ 등의 손팻말을 들어올렸다.

이들은 한 대행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이라고 평가하면서 “대통령에게 위임된 권한인 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등 위법 행위까지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집회 참가자 일부는 한 대행에게 다가가려 했으나 경호 인력에 가로막혀 돌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한 대행은 이날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 방문 이후 대인시장 등을 들렀다가 상경할 예정이었지만 시민단체 반발 등이 감지되자 이후 일정을 취소했다.

정성현 기자

권성동 “韓 경선 출마 없어… 추가 언급 흥행 도움 안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당내 일각서 불거진 ‘한덕수 차출론’을 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의) 추가적인 출마설 언급은 국민의힘 경선 흥행

은 물론 권한대행으로서의 중요 업무 수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대선 경선은 이재명 추대식에 불과하다. 우리 이보다 압도적인 품격과 식견을 보여줘야 한다”며 “후보자와 캠프 관계자들은 정책과 비전, 본선 경쟁력을 놓고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

이울러 “국가와 국민, 미래가 우리에게 달려단 각오로 페이스레이를 해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한대행의 경선 불참은 지도부 차원에서 의사를 확인한 것인가’란 질문에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고 여러 루트(경로)를 통해서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게 확실시돼 그렇게 발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